

## 지적업무 확대방안 연구\*

-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Cadastral Work

- Focusing on the Press Release -

이 효 상\*\*

Li, Hyo Sang

#### 요 약

지적업무는 시·군·구와 시·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별 사무분장과 최근 3년간의 보도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의 유기적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적부서 사무분장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무분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적부서의 조직이 토지 관련 “국”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에서 공간정보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공간정보소관청 도입 및 공간정보 총괄 부서 지정, 전문 직렬의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지적기반의 부동산정보, 공간정보, 주소정보, 부동산거래분석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주요어 : 시·군·구, 시·도, 중앙정부, 지적업무, 사무분장, 보도자료

#### ABSTRACT

Cadastral affairs are promoted by cities, counties, districts, cities, provinces, and central governments. The division of office work for each institution promoting cadastral work and press releases for the last three years were analyz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rganic cooper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cities, province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s required. The division of office of the central government's cadastral department does not cover the division of office work of cities, province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h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cadastral department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land-related "bureau." Second, to efficiently promote real estate management work through the convergence and combination of real estate and Geospati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Geospatial information agency that will lead the expansion of the cadastral work area, designate a general department in Geospatial information, and arrange a professional. Third, the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Center should be expanded and established as a tentatively named national real estate information center that includes real estate transaction analysis functions so that cadastral-based real estate information, Geospatial information, and address information can be integrated and operated for the expansion and reorganization of overall cadastral work.

Keywords : City · County · District, Cites·Provinces, The Central Government, Cadastral Work, Division of Office, Press Release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신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정희원·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조교수(E-mail: hs72@shinhan.ac.kr)

## 1. 서 론

구한말 대한제국 판적국에서 시작된 지적업무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업무를 제외하고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다. 이관 당시 국토정보제도과(2008), 지적기획과(2013), 공간정보제도과(2015~현재)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 단위는 국토정보정책관 소속이다. 일선 시·도 및 시·군·구의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소속 조직과 명칭이 다르다. 운영 법률 또한 「지적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정부, 시·도 및 시·군·구의 조직구성과 사무분장을 내용을 분석하고, 최근 3년간 각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분석을 통하여 시대적 환경에 부합된 지적업무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과 범위는 중앙정부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지적제조사기획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담당관, 경기도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연천군 지적팀 지적조사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를 대상으로 하여 2021~2023년까지 각 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집한 후 목록화하고, 업무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정부는 각 기관의 직제시행규칙 중 해당부서의 사무분장을 분석하였고, 지방정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분석하였다.

지적업무와 관련된 그간의 선행연구는 “지적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GIS 응용 프로그램 개발(성동권·김혁·고재웅/[2001])”, “지적행정기획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김영학/[2005])”, “워크플로우 관리시스템(WfMS)을 이용한 지적업무 개선방안 연구(윤정환·이성화/[2008])”, “지적통합법 시행에 따른 지적제도의 발전 과제(이현준/[2022])”, “지적업무 활용을 통한 국공유지 관리방안 연구(김동규·변병설[2016])”,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연구(강한빛·이범관[2018])”가 수행되었다.

연구내용은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중 2단계 구축 과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 제시로 영상입력방법, 지적도면 전산화 방법, 전산자료의 활용 및 갱신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sup>1)</sup> 지적행정기획의 일반적 이론을 검토하여 지적행정기획을 조정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고, 조정모형에 의한 지적업무 운영지침을 분석하여 지적행정 기획의 체계적 조정모형을 제시,<sup>2)</sup> 잦은 보직전환과 담당업무의 변경으로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습득·운영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워크플로우 관리시스템을 응용하여 가칭 지적업무 고도화시스템 (CBES; Cadastral Business Enhancement System)을 설계하고 제안함으로써 지적 업무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작업시간 단축, 재교육 시간과 비용 절감을 연구,<sup>3)</sup> 지적제도가 공적 측면에서 국토공간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근간으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사적 측면에서는 「부동산등기법」과 함께 토지등록제도의 본질이 담보될 수 있는 입법 분리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지적의 구축사업 및 그에 따른 지적측량시장의 개방을 위한 법적 정비가 요구된다는 점, 미래지향적인 지적기술자격제도의 신설 및 지적협회 등의 창설도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논거를 통해 피력하였고, 그에 대한 각

1) 성동권 외 1명, “지적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GIS응용 프로그램 개발”, 『한국측량학회지』, 제19권 4호, 2001, p.395.

2) 김영학, “지적행정기획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7권 3호, 2005, p.149.

3) 윤정환 외 1명, “워크플로우 관리시스템(WfMS)을 이용한 지적업무 개선방안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제38권 2호, 2008, p. 219.

각의 발전 방향까지도 제시,<sup>4)</sup> 기관별 관리 토지에서 필지 수 대비 한정된 관리 조직과 인력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출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및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공유지의 필지별 토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국공유지 필지별 데이터와 관리 조직을 중심으로 현황 관리가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국공유지 필지별 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sup>5)</sup>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확립 방향은 첫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련된 법 조항을 통합하여 가칭 지적관리법을 제정하고 둘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산하에 지적관리과를 신설하며 셋째, 지적업무와 등기업무, 지가업무, 이용규제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외청인 토지관리청을 신설한다. 넷째,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 국토정보공사는 일 필지의 물리적 권리적 가치적 이용규제적 정보를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sup>6)</sup>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도, 사무분장, 보도자료 분석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향으로 지적업무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2. 지적업무 조직 및 사무분장

### 2.1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지적업무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국토정보정책관 아래 공간정보제도과와 별도조직인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에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명 업무는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에서 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그림 1〕 공간정보제도과 조직도 일부수정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그림 2〕 지적재조사기획관 조직도 일부수정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그림 3〕 주소생활공간과 조직도 일부수정

4) 이현준, “지적통합법 시행에 따른 지적제도의 발전 과제”, 「지적과 국토정보」, 제39권 2호, 2009, p.11.

5) 김동규 외 1명, “지적업무 활용을 통한 국공유지 관리방안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제46권 1호, 2016, p.149.

6) 강한빛 외 1명,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3호, 2018, p.181.

### 2.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면 공간정보제도과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의 입안·운영 및 제도의 연구·발전, 국가측량 및 지적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측량단일화 및 지적조사·등록방안 연구, 측량·지적 제도의 일원화 방안, 공간정보 기술자격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한 운영 지원, 지적측량수행자 및 관련 비영리법인의 등록·지도·감독, 지적측량 수수료체계의 운영·고시 및 개선,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정보화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차원 지적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미등록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전국 지적통계의 작성 및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관리에 관한 사항, 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전환에 관한 사항,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측량·지적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기준점·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최신 측량기술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디지털 지적 표준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이다.<sup>7)</sup>

### 2.1.2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지적재조사기획관의 경우 직제에는 없는 별도 조직으로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사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및 시행규칙,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등 법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개편 등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조직, 인력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변환에 관한 사항, 일필지조사 업무·등록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내 토지이용 현황 관리,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사업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업무편람, 연차보고서 및 백서 작성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교육, 기술인력 인정제 등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바른땅 아카데미 운영, 소식지 발간 등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분쟁사례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BSC 관리, 포상업무, 국회업무, 각종 워크숍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sup>8)</sup>

### 2.1.3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면, 주소생활공간과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관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주소정보기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도 통합관리 및 갱신, 주소정보 품질관리·유통 및 주소전환·갱신 지원,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융합·보급,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공유,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협회·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추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운영이다.9)

위와 같이 살펴본 중앙정부의 조직 및 주요 업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중앙정부 조직 및 주요 업무

조직명	주요 업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법령, 국가측량 및 지적정책, 공간 정보 기술자격, 3차원지적, 세계측 지계전환, 지적표준, 부동산종합공 부시스템, 중앙지적위원회 등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	법령,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지적 재조사사업, 중앙지적재조사위원 회, 기술 및 교육, 국제협력 등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법령, 시스템, 주소정책, 주소정보 시설, 주소정보시스템, 품질관리 및 교육·홍보, 주소정보활용지원 센터, 주소정보위원회, 주소산업, 옥외광고물등

## 2.2 시·도

지방정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적업무 현황을 조사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경기도는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담당관, 경기도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의 조직도는 [그림 4]와 같다.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그림 4) 토지관리과 조직도 일부수정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그림 5) 공간정보담당관 조직도 일부수정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그림 6) 경기도 토지정보와 조직도 일부수정



출처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그림 7) 인천광역시 토지정보와 조직도 일부수정

## 2.2.1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토지관리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토지관리·토지조사에 관한 사항, 부동산 실명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적전산화에 관한 사항, 지적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공유토지분할 정리에 관한 사항, 「외국인토지법」 운용에 관한 사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측량업 등록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측량기준점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의한 공간정보 운용 등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이다.<sup>10)</sup>

## 2.2.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의 사무분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조정 및 국가공간정보 체계 구축 추진, 3차원 기반 Virtual Seoul 구축·운영, 수치지형도 제작, 갱신 및 유지관리,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공간정보 표준화 및 보안관리,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운영, 유통·개방 및 개발 지원, 공간정보 플랫폼 및 정책지도 구축·운영, 2차원 기반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항공사진의 촬영·관리·활용,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실내공간 및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회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무인동력 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활용,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구축·운영,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이다.<sup>11)</sup>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2.2.3 경기도 토지정보과

경기도 토지정보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발이익환수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에 관한 사항, 외국인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지적관리 운영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표본검사에 관한 사항,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유토지분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측량업(일반, 공공, 지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명의 제정·변경 등 지명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 통합 백업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명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수사에 관한 사항,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수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다.<sup>12)</sup>

### 2.2.4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과태료 부과·징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토지의 투기적 거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토지 및 지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토지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에 관한 사항, 측량업 및 지적측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이동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자치구 지적관리 업무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지적일반 민원에 관한 사항, K-Geo 플랫폼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적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비법인 등의 등록번호에 관한 사항, 항공영상 및 위성영상에 관한 사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사항, 국가공간정보체계(NSDI)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에 관한 사항,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정보 인터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공간정보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자료(수치지형도 등)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드론활용 영상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 공간 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스마트 GIS 추진에 관한 사항이다.<sup>13)</sup>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적부서의 주요 업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표 2〉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조직 및 주요 업무

조직명	주요 업무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 법률, 부동산동향분석 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제, 공시지가 제도, 부동산개발업, 서울부동산정보 포털, 부동산중개업, 지방지적위원회, GNSS 기준국, 지적확정측량검사, 지적재조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담당관	공간정보정책, 3D 기반 Virtual Seoul, 도시공간정보 포럼, 주소정보, 공간정보 보안심사, 드론공간정보, 항공사진판독, 수치지형도, 지하시설물, 통합공간정보시스템, 공간정보표준, 뉴딜일자리, 스마트서울맵, 스마트블 편신고 등
경기도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 개발이익환수제도, 외국인 토지관리, 토지정보 주요시책, 지적확정측량검사, 부동산실명제, 부동산실거래가, 측량기준점, 지방지적위원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업, 경기도부동산포털, 공간정보관리, 무인비행장치,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 지명의 제정·변경,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등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시장분석, 부동산실명제, 주택임대차신고제, 지적확정측량검사, 감정평가법인 선정, 지적재조사, 부동산개발업, 세계측지계, 주소정책, 주소정보위원회, 사물주소 및 상세주소, 공간정보, 공간정보보안, 공간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 관리, 스마트GIS,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항공영상, 무인비행장치, 수치지형도 등

## 2.3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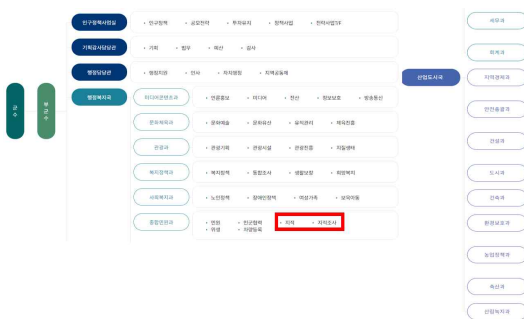
일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시·군·구는 의정부시, 연천군, 도봉구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의정부시는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연천군은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지적조사팀, 도봉구청에는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로 조사되었으며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처 : 의정부시 홈페이지

〈그림 8〉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조직도



출처 : 연천군 홈페이지

〈그림 9〉 지적팀 및 지적조사팀 조직도 일부수정



출처 : 도봉구청 홈페이지

〈그림 10〉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조직도



### 2.3.1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과 서무 및 예산·회계,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결의, 토지표시변경 등 기촉탁, 소유권 변동정리, 지적전산자료 조회 제공,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 연속(편집)도 관리, 기타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등 민원발급,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토지거래 사후 실태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동산개발업 관리,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특별법 운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특별법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개별공시지가 민원처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관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부동산거래가격 신고제도 운영, 부동산거래가격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외국인 부동산취득 허가 및 신고제도 운영, 주택거래신고제도 운영, 부동산매매계약 검인제도 운영,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징수, 부동산실명법 제도 운영, 도로명주소의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KAIS)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관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변경·폐지 관련,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와 건물번호판, 교부 등 관련 업무(책임동의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제외), 사물주소 부여·변경·폐지 관련 업무,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련, 도로명주소 관련 고지 및 고시, 도로명주소의 공적장부 등 주소전환, 도로명주소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확정측량 검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지적도 오류사항 정비, 국가소송 수행, 공간정보 종합계획 수립,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공간정보 DB 유지관리, 수치지형도 제작 및 관리,

도시기준점 관리,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이다.<sup>14)</sup>

### 2.3.2 연천군 지적팀 및 지적조사팀

연천군 지적팀 및 지적조사팀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 업무, 부동산 매매계약 실거래 신고 및 검인업무,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지적민원 처리, 지적측량 검사 및 정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측량업무 지도·감독,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 지적공부의 조제 및 재조제 업무, 공유토지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및 지적사무 기획,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 조상 땅 찾아주기, 안심상속,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정리, 부동산 소유권이전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법인 아닌 사단·재단등록번호 부여 관리, 지적전산시스템 관리, 지적통계 보고, 부동산실명제,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 지적재조사 업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이다.<sup>15)</sup>

### 2.3.3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사무분장은 지적제도 운영 및 토지정책업무 총괄, 부동산중개업 업무 및 지도·감독,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관리제도 운영, 지적공부관리, 토지이동과 소유권정리, 지적공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지가 조사·산정·결정,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지가 민원처리, 지가현황 도면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건축물대장 관리 및 보존, 건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축물대장 작성 및 정리, 등기필통지서 정리 및 등기부 열람 소유권 정리, 건축물대장 제증명 발급, 건축물대장 관리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 처리, 도로명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및 고지·고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도로명주소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다.<sup>16)</sup>

〈표 3〉 의정부시, 연천군, 도봉구 조직 및 주요업무

조직명	주요업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이동, 토지거래 허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지적공부 발급,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신고,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도로명주소 홍보,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 지점번호,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공간정보 사업추진, 무인기(드론) 운영, 공간정보시스템 등
연천군 지적팀 및 지적 조사팀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이동정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통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연속지적도,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토지소유권 정리, 토지표시변경,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변환, 도로명주소, 공인중개사 관리, 부동산거래 신고, 토지거래허가 등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중개업무, 부동산거래신고, 토지이동처리, 측량기준점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 건축물대장 등록 및 편제,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부동산민원서류 발급, 주택임대차 신고제 등

## 2.4 시사점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의 조직과 사무분장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적업무와 지적재조사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가 주요 업무이다. 그러나 시·도 및 시·군·구는 지적업무, 토지거래, 중개업, 지가조사, 도로명, 공간정보로 분야가 중앙정부보다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동산 업무가 지적업무보다 그 비중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도와 시·군·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대도시 지역의 경우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지적재조사, 주소정보, 공간정보팀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토지 및 부동산 업무로의 조직 개편과 사무분장 확대가 필요하고 시·도 및 시·군·구와 상호 유기적 업무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정보 업무는 시·도와 시 단위에서는 사무분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군, 구 단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간정보 업무는 군, 구 단위까지 확대가 필요하고, 지적소관청처럼 공간정보소관청 도입과 총괄 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

## 3. 보도자료 분석을 통한 업무 확대 방안

### 3.1 보도자료 조사

일반 국민이 지적 업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론을 통하여 접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시·도 및 시·군·구의 최근 3년간의 보도자료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보도자료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 도봉구, 연천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목과 배포일자, 조회수를 조사하였고, 검색 기간은 최근 3년(2021~2023년)으로 하였으며, 아래는 검색 화면이다.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보도자료

번호		작성일		RSS Feeds	승인대기
<b>보도자료</b>					
전체 : 8/9 건		작성처 ▼ 주소	검색 🔍	신뢰평가 3	
번호	제목	항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3	주스기반 데이터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주스정책과	2022.07.03.	4457
42	인공조림, 비영리금속사업 연단하다. 주스정보 재능 기술포럼 개최	☑	주스정책과	2022.06.27	2699
41	스마트 주스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일류농산물 홍보·매출 촉진	☑	주스정책과	2022.06.07	4153
40	구로지역 앞서는 국가차량번호, 주스정보농민집에서 착안 가능	☑	주스정책과	2022.02.27.	7324
39	주스정보시스템을 고려한 지리정보 시스템까지 선진화다	☑	주스정책과	2022.02.24	4976
38	함남반-지자체, 국가차량번호 관련실용 전국 열려조사 추진	☑	주스정책과	2022.02.20	5236
37	중앙-지자체 주스기반 산업·유통 확대 위해 열었다	☑	주스정책과	2022.01.19	4447
36	고효율 온 주스체계 확립으로 현상급 다목적성 얻게된다	☑	주스정책과	2021.12.13.	1680
35	2차 산업에 주스정보를 결합한 새로운 혁신 모델 열었다	☑	주스정책과	2021.09.22.	1841
34	농촌부터 달라지는 주스제도 시행, 생활 속 주스 시작돼 겠다	☑	주스정책과	2021.08.08.	3631

(그림 1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검색 화면

[illegible]

(그림 14)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작성 목록 현황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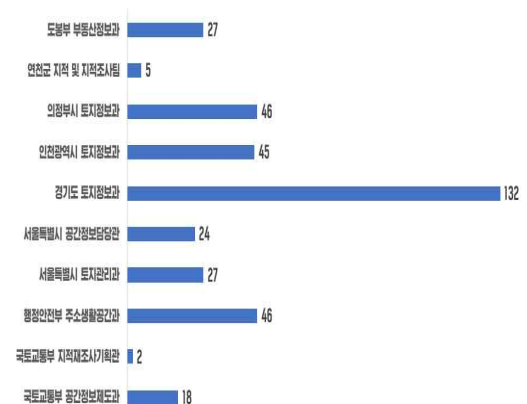
(그림 12)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검색 화면

[illegible]

(그림 13) 의정부시 보도자료 검색 화면

보도자료 배포 순위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료의 구성은 연번, 제목, 제공 일자, 조회수, 구분으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자료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조사된 자료의 제목을 보고 부동산, 지적, 공간정보, 도로명으로 구분하여 별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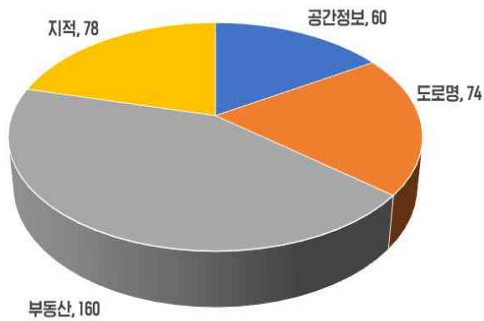
아울러 총 10개 기관의 분석 목록은 372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그림 15〕 10개 기관 보도자료 작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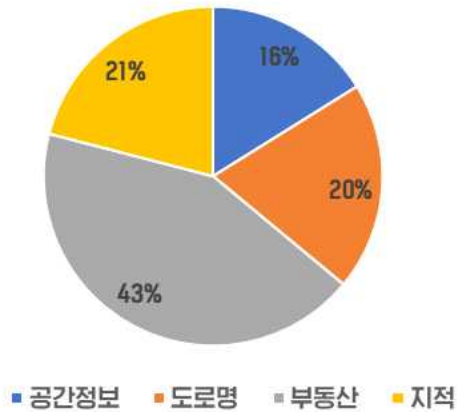
### 3.2 보도자료 분석

작성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업무 현황 분석하였다. 우선 보도 제목 분석을 통하여 지적(재조사 포함), 도로명, 부동산, 공간정보로 구분하였다.



[그림 16] 분야별 보도자료 제공 현황

전체 372건 중 가장 많이 보도된 내용은 부동산 관련으로 160건이었으며, 공간정보가 60건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부동산 관련 보도자료 건수를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수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동산 관련 업무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다고 할 것이다. 분야별 보도자료 제공 현황과 비율은 [그림 16]과 같다.



[그림 17] 분야별 보도자료 제공 비율

다음으로 보도자료 조회수를 분석하였다. 조회수는 도로명, 지적, 부동산, 공간정보 순으로 분석되었고, 보도자료의 조회수는 중앙정부의 수치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보도자료 조회수 및 비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고, 비율은 도로명, 지적, 부동산, 공간정보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4〉 보도자료 조회수 및 비율

구분	건수	비율
공간정보	34,193	9%
도로명	155,810	40%
부동산	97,416	25%
지적	99,278	26%
합계	386,697	100%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의 순위를 조회수 기준으로 10위까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적 분야가 5건, 도로명 분야가 5건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정부 보도자료 조회수 기준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5〉 중앙정부 보도자료 조회수 10위

제목	조회수	분야
지적측량도 드론으로... 효율성·정확도 높인다	8,258	지적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8,191	지적
전국 주소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주소정책 발전논의	8,034	도로명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7,322	도로명
한국의 미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이끌어갈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생긴다	6,873	도로명
지난해 국토면적 11.3km <sup>2</sup> 증가, 여의도면적 4배	6,147	지적
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5,822	도로명
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5,628	지적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5,339	지적

상위 10위의 보도자료 제목은 지적측량도 드론으로... 효율성·정확도 높인다,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전국 주소담당자 한

자리에 모여 주소 정책 발전논의,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 정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한국의 미래 주소 정보산업 창출을 이끌어갈 ‘주소 정보 활용지원센터’ 생긴다, 지난해 국토 면적 11.3km<sup>2</sup> 증가, 여의도 면적 4배, 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 도로에 도로명주소 부여, 지적확정 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행안부-지자체, 국가지점번호관 관리 실태 전국 일제 조사 추진이다. 보도자료 제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지적 관련 업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일 때 조회수 높고, 도로명의 경우 성장 및 새로운 제도 도입(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입체

주소)에 관한 사항이 조회수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시·도 및 시·군·구의 보도자료 조회수를 분석하였다. 상위 10위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순위는 압도적으로 부동산 분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곧 지적업무 확대방안에 대한 방향을 알려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사항이 무려 6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밖에도 공시지가 관련이 2건, 정보제공 및 과제 추진이 각 1건으로 분석되었다.

### 3.3 업무영역 확대 방안

〈표 6〉 지방정부 보도자료 조회수 10위

제 목	조회수	분야	도시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642,606필지 결정·공시	3,713	부동산	인천
도, 남양주 진건, 하남시 상산곡동 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3,527	부동산	경기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3,195	부동산	인천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 차단 총력	2,607	부동산	서울
2023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최근 집값 하락 등 영향	2,294	부동산	경기
서울시, 신숙 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2,195	부동산	서울
서울시,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2,128	부동산	서울
도, 지난해 경기도 면적 3.6배 규모 '토지정보' 제공. 재산권 보호 기여	2,026	지적	경기
도, 올해 '강통전세 피해 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중점 추진	1,972	지적	경기
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1,840	부동산	경기

지적은 행정의 기초정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활동에 있어 지번, 경계 등은 부동산 물건지의 핵심 요소이다. 일선의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분장과 보도자료를 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지적 관련 업무보다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업무 확대를 위해서는 지적을 기반으로 부동산, 도로명, 공간정보 분야로 확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조직과 사무분장을 보면 지적에서 부동산, 도로명, 공간정보 분야로 업무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우 지적직 공무원들은 순수 지적업무와 도로명주소 업무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지적업무가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당시 지적업무가 국토정보 분야가 아닌 토지 관련 분야로 이관되었다면 일선의 시·도 및 시·군·구가 원활한 소통 업무체계를 구성하게 되어 중앙정부-시·도-시·군·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경제 발전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적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사무분장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무분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적부서의 사무분장은 지방정부와 소통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정보와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공간정보소관청 도입 및 공간정보 총괄부서 지정, 전문직렬의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인 지적업무 확대 개편을 위해 지적기반의 부동산정보, 공간정보, 주소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신설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부동산거래정보를 포함하는 센터로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와 국가공간정보센터는 토지정책관으로 이관되어야 하고, 부서의 명칭도 부동산제도과로 변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공간정보센터는 국가부동산정보센터로 변경하고, 부동산제도과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사무분장을 참고하여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직제와 사무로 토지정책관이 개편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공간정보센터는 부동산거래 분석업무를 강화하고, 공간정보, 토지정보, 과세정보, 주소정보, 부동산정보기업과 협력 등을 각종 부동산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부동산 데이터마트로 확장되어야 하고, 국가부동산정보센터는 개인별 토지와 건물 보유 현황, 소유권 변동 사항,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액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토지관련 “국”으로 조직 개편하여 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가공간정보센터(부동산거래분석 기능 포함)를 “국가부동산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의 개편 조직도(안)는 다음과 같다.



(그림 18) 공간정보제도과 조직 개편(안)

아울러 군 단위와 구 단위에 사무분장에도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소관청처럼 공간정보소관청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공간정보소관청을 도입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고, 공간정보 업무는 중앙정부, 시·도와 유기적 업무 소통 채널 확보를 위해 지적조직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전국의 모든 시·군·구의 행정조직에는 지적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정보 업무를 지적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총괄 부서 지정이 필요하고, 이는 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일선 군과 구의 사무분장에 포함될 공간정보 관련 업무 내용은 관할 구역의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공간정보구축 및 활용,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공간정보 DB 유지관리, 지하시설물 구축 및 운영, 드론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공간정보 교육·홍보 및 정책발굴, 공간정보 표준화 및 보안관리, 도시기준점 관리 등이다. 그리고 공간정보 업무의 추진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시·도와 소통이 가능한 전문 직렬의 배치가 필요하다.

## 4. 결 론

지적업무 확대를 위하여 우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조직과 사무분장, 그리고 최근 3년간의 보도자료를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와 지적제조사기획관, 행정안전부의 주소생활공간과를 대상으로 조직과 업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와 공간정보담당관, 경기도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시·군·구의 경우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연천군의 경우 종합민원과(지적 및 지적조사팀)에 대하여 조직과 사무분장을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 최근 3년간의 보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건수는 372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앙정부는 지적, 도로명 업무의 조회수가 상위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상위 10위의 순위 중 약 80%가 부동산 및 토지관련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만큼 지방정부의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관련 업무의 중요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지적업무 확대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의 유기적 업무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의 직제가 토지관련 “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둘째, 군·구 단위의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체제로 공간정보소관청 도입과 총괄부서 지정이 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인 지적업무 확대 개편을 위해 지적 기반의 부동산정보, 공간정보, 주소정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센터가 국가부동산정보센터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제도과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토지관련 “국”으로 조직 개편하여 지방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가공간정보센터(부동산거래분석 기능 포함)를 “국가부동산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공간정보 업무를 지적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사무분장에 공간정보 관련 사무가 포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공간정보 업무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직렬의 배치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적관련 부서가 토지관련국으로 배치하고, 전문 직렬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원활한 소통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모델이 완성되어 그 효과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까지 공간정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소관청 도입된다면 늘 고민하는 공간정보 갱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향후 연구로는 지적기반의 부동산 및 공간정보 제도 운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경기도청(<https://www.gg.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3. 국토교통부(<https://www.molit.go.kr/portal.do>)
4. 도봉구청(<https://www.dobong.go.kr/>)
5. 서울특별시청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6. 연천군청  
(<https://www.yeoncheon.go.kr/www/index.do>)
7. 의정부시청(<https://www.ui4u.go.kr/main.do>)
8. 인천광역시청  
(<https://www.incheon.go.kr/index>)
9.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irt/a01/firtMain.do>)
10. 강한빛 외 1명,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3호, 2018.
11. 김동규 외 1명, “지적업무 활용을 통한 국공유지 관리방안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제46권 1호, 2016.
12. 김영학, “지적행정기획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7권 3호, 2005.
13. 성동권 외 1명, “지적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GIS응용 프로그램 개발”, 『한국측량학회지』, 제19권 4호, 2001.
  14. 윤정환 외 1명, “워크플로우 관리시스템(WfMS)을 이용한 지적업무 개선방안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제38권 2호, 2008.
  15. 이현준, “지적통합법 시행에 따른 지적제도의 발전 과제”, 『지적과 국토정보』, 제39권 2호, 2009.
- (접수일 2024.03.10, 심사일 2024.03.12, 심사완료일 2024.03.22.)